

02 국토·해양

1. 지역개발사업 관리업무, 지방국토청에 위임

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☎ 044) 201-3667

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지역개발사업 관리를 위해 2016년 1월부터 지역개발사업의 예산교부, 집행점검, 경미한 사업변경 등 관리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할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 책임성 있는 국고보조금 관리가 미흡하여 대내외 비판이 고조되었으나, 지방국토청 사업관리 위임으로 현장중심의 보다 철저한 국고보조금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- 이를 위해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위임사무를 고시하였으며, 아울러 지방국토청 및 지자체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등을 위해 세부집행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.

(참고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> 국토교통뉴스 > 보도자료 > 지역개발사업 관리업무, 지방국토청에 위임

지역개발사업 관리업무, 지방국토청에 위임

- 추진배경 국고보조금 관리 미흡에 따른 관리강화 방안 마련
- 주요내용 ① 보조금관리 업무 지방국토관리청 위임 및 위임사항 고시
② 보조금 집행관리 내용과 절차 등을 규정한 위임사무 세부집행지침 마련
-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

2. 공장설립, 건축행위 등 토지이용 인허가 빨라진다

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☎ 044) 201-3707

앞으로 일반국민이나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건축허가(건축법), 공장설립승인(산업집적법), 개발행위허가(국토계획법)에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고, 시간은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.

- 3개 위원회를 통합심의하고 일괄 협의를 진행하여 전체 인허가 기간이 3개월~4개월 단축되고, 사업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- 또한, 관계기관 협의기한, 위원회 심의기한, 보완회수 등이 법령에 명시되어 언제 인허가가 완료될지 가늠할 수 있고
- 인허가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심의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됩니다.

(참고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> 알림마당 > 보도자료 > 건축·개발행위·공장설립 허가 기간 대폭 단축된다

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

- 추진배경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 건축(건축법), 공장설립(산업집적법), 개발행위(국토계획법) 관련 인허가 개선 추진
- 주요내용
 - ① (절차 간소화) 여러 위원회를 통합심의위원회로 재구성하고 심의, 관계기관 일괄협의, 서류보완횟수 단축, 위원회 재심의 횟수 설정
 - ② (예측성 강화) 관계기관 협의, 위원회 심의 기한, 보완회수 등을 명시하고, 투자비용 손실 최소화를 위한 인허가 사전심의도 도입
 - ③ (조정기능의 내실화) 기관 간, 기관·민원인 간 이견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합동조정회의, 토지이용인허가조정위원회 운용
 - ④ (지원체계의 구축) 인허가 업무의 One-Stop 처리를 위한 통합인허가 지원센터, 인허가지원시스템 등을 구축
- 시 행 일 2016년 1월 21일

3.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전기료 지원 확대

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☎ 044) 201-4342

여름철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 개방이 곤란한 소음대책지역에 냉방시설 가동을 위한 전기료 지원이 확대됩니다.

- 지금까지는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와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만 지급되던 냉방시설용 전기료를 일반 주민들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- 우선,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·고시 당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하고, 제2차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에 따른 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.

(참고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> 알림마당 > 보도자료 > 소음대책 중기계획 수립

2016년도 소음대책사업 확대 항목

- 추진배경 소음대책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
- 주요내용
 - ① 소음대책지역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대상 확대(기초생활수급자 → 일반주민)
 - ② 소음대책지역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 확대(제1종 → 제3종 가)
- 시 행 일 2016년 6월(잠정, 개정안 국회심의 중)

4. 공항주변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대상 확대

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☎ 044) 201-4342

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의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대상이 확대됩니다.

- 지금까지는 항공기 소음 심충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억제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대상 지역을 한정하여 운영하였으나, 소음대책지역 주민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확대됩니다.

(참고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> 알림마당 > 보도자료 > 소음대책 중기계획 수립

2016년도 소음대책사업 확대 항목

- 추진배경 소음대책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
- 주요내용 ① 소음대책지역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대상 확대(기초생활수급자 → 일반주민)
② 소음대책지역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 확대(제1종 → 제3종 가)
- 시 행 일 2016년 6월(잠정, 개정안 국회심의 중)

1. 수산장비 구입지원을 위한 융자금 대출 실시

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☎ 044) 200-5461

정부는 내년부터 어업인 등이 고가의 수산장비를 구입할 경우 장비 구입액의 80%까지 융자금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.

- 그동안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 시 어업인의 부담이 있었으나, 내년부터는 정부로부터 수산장비 구입 자금을 지원받게 되어, 어업인들이 경영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수산 장비구입 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시군구를 통해 장비 구입 신청서를 제출하고, 자금 대출기관(수협)에서 자격 여부를 심사 한 후 융자금을 대출하게 됩니다.
- 수산 장비구입 자금 지원대상은 수산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(유통·가공), 어업인,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입니다.
- 지원대상 장비는 영세율 및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

2016년도 수산장비 구입 지원(융자)

- 추진배경 고가의 수산장비를 구입하는 어업인 등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, 고품질·고성능 수산기자재 사용 기반 마련으로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
- 주요내용
 - 수산장비 구입 지원(수산발전기금 30억원 편성)
 - 융자조건
 - 장비가격의 80% 이내 (융자 1억원 한도 / 고정금리* 연 2.0%~3% 또는 3개월 변동금리(매월고시) 1년거치 7년 균등 상환) * 고정금리 : 어업인(개인) 2.0%, 조합등 3.0%
- 시 행 일 2016년 3월(잠정)

2.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개시

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☎ 044) 200-5431

태풍·적조 등 재해피해, 수산질병·유류오염·출어제한 등 자연적·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어업인 등에게 2016년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

- 영어자금(2.5%)보다 낮은 1.8%의 금리를 적용하고 변동금리 선택도 가능하므로 어업인의 경영안정 및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 -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출기간은 1년 이내이며, 운전자금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.
- 2016년에는 총 300억원 범위 내에서, 어업인당 영어자금 소요액의 15% 이내,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.

(참고)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> 소식바다 > 새소식 > 공지사항 > 수산발전기금 사업시행지침

긴급경영안정자금 개요

- 목 적 자연적·사회적 재난에 따라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
- 지원대상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어업인
 - ① 태풍, 적조, 저·고수온 등 재해피해 어업인
 - ② 수산질병, 유류오염 등에 따른 피해어업인
 - ③ 법령 등에서 어업경영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
- 지원조건 (금리) 1.8%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
(기간/용도) 1년 이내 / 운전자금
-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

3. 급유선 없어도 유조차량에 대해 '선박급유업' 등록 허용

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☎ 044) 200-5773

선박급유업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유조차량만으로도 급유업 등록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.

- 선박급유업은 반드시 급유선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, 방제장비 구비 등 사전 안전조치를 갖춘 경우 항만별 여건을 고려하여 유조차량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급유업 등록을 허용함으로써
 - 선박급유업체가 없거나 적은 소규모 항만이나 소형선박 등에 대해서는 유조차량을 통해 급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상상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적기에 급유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.

유조차량에 대해 선박급유업 등록 허용

- 추진배경 소형선박 등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급유서비스 제공
- 주요내용
 - ① 「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」 선박급유업 등록 요건 완화
 - ② 보험가입, 방제장비 구비 등 세부기준에 따라 항만별 여건을 감안하여 항만관리청에 등록 허용
- 시 행 일 2016년 상반기(잠정)

4.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대상에 제주도 본도 포함

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☎ 044) 200-5465

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의 대상지역이 2016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본도의 읍·면지역으로 확대 됩니다.

- 2015년까지 2015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본도를 제외한 부속도서에 대하여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시행됨에 따라, 그동안 농업분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.
- 이에, 농업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, 2016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본도의 읍·면지역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대상에 포함되어 약 3,000여가가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조건불리수산직불제 제주본섬 포함

- 추진배경 농업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
- 주요내용 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대상에 제주도 본도(읍·면지역) 포함
-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

5.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

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☎ 044) 200-5471

양식어업인이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덜 수 있도록 양식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늘리고, 보장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.

- (대상품목) 2016년 상반기 1개 품목을 상품화하는 등 연말까지 총 3개 품목을 신규 도입하여 대상품목을 24개로 확대합니다.
 - ※ 2016년 도입품목: 미더덕, 오만둥이, 능성어 / 총 24개 품목
- (보장범위) 해조류 품목의 보장재해 범위에 조수(潮水)피해를 추가하는 등 재해보험 보장혜택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.
 - 미역과 다시마의 보장 재해 범위에 조수(潮水)를 추가하고,
 - 전복의 경우 보험 목적물 범위를 현재 해상에서 육상까지 확대합니다.
 - ※ 조수(潮水): 달·태양의 인력에 의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바닷물

(참고)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> 알림마당 > 보도자료

2016년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

- 추진배경 현장 수요에 부응한 양식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
- 주요내용 ① 대상품목 확대 (21개 품목 → 24개 품목 + 3개 품목)
 - ② 보장범위 확대
 - 해조류 중 미역·다시마 품목 보장재해 추가: 조수(潮水)
 - 전복 품목 보험목적물 확대: (기존) 해상 → (확대) 해상·육상 양식전복
- 시 행 일 2016년 3월(잠정)
 - * 대상품목 확대 및 세부일정은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·의결 후 확정

6. 어선원보험, 당연(의무)가입대상 확대

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☎ 044) 200-5468

5톤 미만 소형 영세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재해보상을 강화하여, 2016년 1월 1일부터 어선원보험의 당연(의무)가입 대상이 4톤 이상으로 확대됩니다.

- 어선원보험은 당연(의무)가입이 원칙이나, 5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어 임의가입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.
 - 2016년부터 현재 ‘5톤 이상 어선’인 당연(의무)가입대상을 ‘4톤 이상’으로 확대 적용하고, 2018년부터는 ‘3톤 이상’으로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
- 제도개선에 따라 어선원보험 당연가입대상이 2015년 9천척(어선원 37천명)에서 2016년 15천척(어선원 48천명)으로 약 6천척(어선원 11천명) 증가할 전망입니다.

(참고)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> 알림마당 > 보도자료

어선원보험 당연가입 확대 계획

- 추진배경 영세·소형어선 승선어선원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
- 주요내용
 - ① 당연(의무)가입 대상 확대 (5톤 이상 어선 → 4톤 이상 어선)
 - ② 2018년부터 3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추진 예정
-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(4톤 이상 확대)

7. 어업인의 안전재해에 대비한 「어업인안전보험」 출시

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☎ 044) 200-5468

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에 대비하고,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어업인안전보험이 출시됩니다.

- 지금까지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어업인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였으나,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」시행 (2016년 1월 7일)에 따라 국가 정책보험인 어업인안전보험으로 확대 시행됩니다.
- 새롭게 출시되는 어업인안전보험은 천일염 제조 종사자를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시켰으며, 보장범위에 어업작업 관련 질병을 포함하고 간병급여·직업재활급여·행방불명급여 등 보험급여를 신설하여 재해보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.

(참고)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> 알림마당 > 보도자료

어업인 안전보험 출시 계획

- 추진배경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 대비 및 어촌 복지증진 향상
- 주요내용
 - ① 보험가입 대상 : 어업인(천일염 제조 종사자 포함)
 - ② 보장대상 : 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·질병·상해 또는 사망
 - ③ 국고지원 :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 지원(경영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가능)
- 보험상품 출시 일 2016년 1월 7일 (법 시행일에 출시 예정)

8. 혼획(混獲)이 허용되는 어업, 혼획저감장치 부착 조업

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☎ 044) 200-5516

조업 중 혼획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어업(근해형망, 연안조망, 새우조망 및 패류형망)에 대하여 일정비율 혼획을 허용하는 대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2016년 6월 1일부터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조업하여야 합니다.

- 지난 2015년 2월 26일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, 혼획이 불가피한 업종에 대해 혼획 허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한 바 있으며,
- 이번에는 혼획 관리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혼획저감장치를 제시하고 어업인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는 물론 과도한 혼획 발생으로 어획물 선별에 소요되는 불편함을 해소하였습니다.

(참고)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> 법령바다 > 고시 >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

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정·시행

- 추진배경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혼획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
- 주요내용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어구에 부착해서 사용하여야 하는 혼획저감장치의 규모, 형태 및 부착방법 등을 정함
- 시 행 일 2016년 6월 1일

9.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절차 간소화

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☎ 044) 200-5921

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시설설치가 가능한 항만시설에 부두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하역장비의 추가·교체공사를 포함 하였습니다.

- 지금까지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를 신설·개축할 때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와 함께 별도로 장비 설치 신고를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 및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있어 왔으나,
-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등을 설치 신고하는 경우 공사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절차를 생략하여 기업의 업무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항만법을 개정하였습니다.

(참고)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> 법령바다 > 입법예고 > 항만법 일부개정안

항만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

- 추진배경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를 추가·교체하는 경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와 함께 장비 설치 신고로 인한 기업의 불편 및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 이중 규제 해소 필요
- 주요내용 ①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시설설치가 가능한 항만시설에 부두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의 추가·교체공사도 포함
② 비관리청의 자회사 및 계열회사가 국가비귀속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
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공제액을 계산
- 시 행 일 2016년 6월 (잠정)

10.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추진

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☎ 044) 200-5961

2016년 상반기부터 그간 공공에서만 개발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를 민간에서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 1종 항만배후단지는 정부, 항만공사 등이 개발한 부지를 민간에 장기임대하고, 입주기업은 물류창고 등의 시설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.
 - 그러나 정부, 항만공사 주도의 개발은 재정 부담에 따른 대규모 예산의 적기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만배후단지 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
- 따라서, 2016년에는 인천 신항만과 평택·당진항 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민간개발을 시행하고, 2017년부터 타 항만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.

(참고)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> 알림마당 > 보도자료

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추진 계획

- 추진배경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을 통한 항만 및 경제 활성화
- 주요내용 ①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허용(공공개발 → 공공·민간개발)
②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분양 허용(임대 → 임대·분양)
- 시 행 일 2015년 12월
※ 시범사업 추진(인천신항 및 평택·당진항 우선 시행)

11. 국가 시행 연안정비사업 대상 기준 상향조정

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☎ 044) 200-5263

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국가가 시행하는 항만구역 외 연안정비사업 대상기준을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며, “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”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.
 - 2016년에는 해양수산부가 시행할 수 있는 연안정비사업 범위를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2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연안정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,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안관리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

(참고) 연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(2015년 3월 3일)

국가 시행 연안정비사업의 범위 조정

- 추진배경 국가 시행 연안정비사업 범위의 합리적 조정
- 주요내용 항만구역 외 국가 시행 연안정비사업 기준 조정
(2015년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→ 2016년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)
-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

12. 해수욕장 안전강화 등 이용환경 개선

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☎ 044) 200-5252

「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개정*으로 이용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해수욕장 시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이용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.

* 2015년 7월 27일 개정안 국회 제출 / 2016년 상반기 국회 통과 전망

- 이용객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은 정비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시설의 영업을 정지*함으로써 사고위험을 원천 차단합니다.
* 법개정 이전까지는 정비명령 불이행시 과태료부과만 가능
- 또한, 해수욕장 금연 및 차마출입 관련 사항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게 하여 상시 금연단속이 가능해지고 차량 출입 금지 구역이 명확하게 되어 해수욕장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.

법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

■ 해수욕장 금연 구역

- 해수욕장내 금연 (흡연 가능) 구역, 시간 등을 조례로 지정
→ 이에 따라 해운대, 광안리 등 도심형 해수욕장은 전지역·전일 금연 가능

■ 해수욕장 차마 출입 구역

- 출입 가능 차마의 종류, 구역, 운행 방법·시간 등을 해수욕장 사정에 맞게 조례로 지정

13.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전면금지

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☎ 044) 200-5303

해양환경 보전, 주변국과의 분쟁예방을 위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금지 됩니다.

- 「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」(2012년 7월)을 수립하여 2013년 분뇨(오니), 음폐수부터 2016년 폐수(오니)까지 단계적으로 금지시켜 왔습니다.
- 앞으로는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, 정밀 모니터링 등 감시 강화를 통하여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도 해소하여 국민 행복 실현에 앞장 설 것입니다.

(참고) 해양수산부홈페이지 > 보도자료 > 폐기물배출해역 정밀조사

해양배출 제로화 추진 계획

- 추진배경 배출해역 환경악화 및 해양투기국 불명예 해소를 위하여 「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」 등을 통해 해양배출 단계적 금지 추진
- 주요내용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 전면금지
-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

14. 5개 물류기업 인증제, 「물류정책기본법」으로 일원화

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☎ 044) 200-5726

물류기업의 행정적·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해 5개 물류기업 인증제를 「물류정책기본법(해수부·국토부 공동운영)」으로 일원화하여 통합 시행할 계획입니다.

- 이전까지 우수화물운송업, 우수물류창고업 등 업종별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제를 각 개별법령에 따라 시행하고 있었으나, 「물류정책기본법」으로 일원화(2015년 12월 23일 시행)하여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- 기존 인증제의 통합과 연속성에 중점을 두어, 4대 사업분야의 5개 인증제를 대상으로 정하였으나 향후 필요한 인증 대상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.
- 또한, 인증심사를 위한 심사대행기관을 일원화 하고, 인증 기준 및 절차를 해수부·국토부 공동부령으로 제정함에 따라 물류기업이 편리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(참고)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> 법령바다 > 공고 > 우수물류기업 인증에 관한 규칙

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 통합 내용				
종 전			개 정	
인증명칭	근거법/기준	대 행	인증명칭(분야)	법/기준/대행
우수화물운송업	화물차운수법/ 국토부령	능률협	(화물운송업)	
우수물류창고업	물류시설법/ 공동부령	통물협, KMI	(물류시설운영업)	물류정책기본법 / 공동 부령 / 공동 지정
우수국제 물류주선업	물류정책기본법/ 국토부령	국제물류협	(물류서비스업)	
우수화물정보망	화물차운수법/ 국토부령	교통연	(종합물류서비스업)	
종합물류업	물류정책기본법 / 공동부령	교통연		

15. 외항여객선 유류할증제 개선

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☎ 044) 200-5718

외항여객선사에서 부과하고 있는 유류할증료에 대하여 유가변동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.

- 현재 선사 자체 유류할증료 기준표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,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선사들에 대하여 자율운임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류할증료가 유가와 연동할 수 있도록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,
- 선사 자율적으로 유류할증료 부과기준표를 마련하여 신고·부과하도록 하고 변동사항을 선사 홈페이지에 고지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.
- 더불어, 선사의 이행사항을 정기점검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외항선사의 운임관리체계 개선방안

- 주요내용 외항여객선사의 유류할증료 부과체계 개선
 - 선사별 유가변동과 연동된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표 신고·부과
 - 변동된 유류할증료 선사 홈페이지에 고시
 - 유류할증료 부과 이행실태 수시점검 등 관리감독 강화
- 시 행 일 2016년 1월

16. 천일염 생산시설 전기요금 20% 인하

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☎ 044) 200-5449

정부는 내년부터 천일염 생산시설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을 현재수준에서 20% 인하할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는 천일염 생산시설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여 연간 약 13억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되었으나, 내년 1월 1일부터는 한중 FTA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요금에서 20%를 할인, 연간 약 3억원의 요금 절감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.
- 현재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한전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에 반영추진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중이며, 금년 말까지 해양수산부와 한국전력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겠습니다.

2016년도 천일염 생산시설 전기요금 인하

- 추진배경 천일염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
- 주요내용 염전에서 사용하는 취·배수용 펌프 등 작동시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현재 적용 중인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에서 약 20% 인하
- 한전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반영하여 실시 예정
-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

17. 국가와 항만공사가 운영하는 시설에서도 항만시설보안료 징수

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☎ 044) 200-5777

항만의 보안강화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항만보안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한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 대상 및 요건을 확대하고 징수절차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.

- 그동안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서만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으나, 전체 시설의 78%를 담당하는 민간 항만시설운영자들은 국가와 항만공사 등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시설과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우려로 보안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제도상 모순이 있었습니다.
- 국가와 항만공사 등이 운영하는 항만시설도 보안료 징수대상에 포함하여 자율·공정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고, 보안료 징수조건 완화 및 징수방법 개선으로 민간 시설운영자들의 원활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.

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 개선

- 추진배경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항만보안 강화 및 민간과 공공부문의 자율·공정경쟁 유도
- 주요내용 ① 「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요령(해양수산부 고시)」개정
②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대상을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민간의 보안료 징수요건 완화와 징수방법 개선으로 보안료 징수 실효성 제고
- 시 행 일 2016년 4월 1일 (잠정)

18. 부두운영회사(TOC) 부두 임대료 체계 개편

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☎ 044) 200-5775

현행 임대료 체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한, 새로운 「TOC 부두 임대료 체계」를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.

- 현행 TOC 부두 임대료 체계는, 다양한 변수를 활용함에 따라 산정방법이 복잡하여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항만운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.
- 이에 기존의 복잡한 선석임대료는 안벽의 재산가치를 중심으로 한 안벽임대료로 개편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
- 창고·야적장·통로 임대료는 기존 산정기준을 유지하되 TOC 운영개시 시점에 관계없이 2003년 이후 누적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업체와 신설업체간 불합리한 임대료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.

부두운영회사(TOC) 부두 임대료 체계 개편

- 추진배경 2004년 이후 항만여건 변화를 반영, 기존 TOC와 신설 TOC간 임대료 격차를 해소 등 보다 합리적인 임대료 체계 마련
- 주요내용 ① 기존 선석임대료를 안벽의 재산가치를 반영한 안벽임대료로 개편
② 창고·야적장·통로 임대료는 TOC 운영개시 시점에 관계없이 2003년 이후 누적 생산자물가상승률 적용
- 시 행 일 2016년 상반기(잠정)

19. 해양원격의료 서비스 확대

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☎ 044) 200-5745

장거리 운항선박 승선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“해양원격의료 서비스*” 대상을 2015년 6척에서 2016년 20척으로 확대하겠습니다.

* 선박에 위성통신 및 원격의료장비를 설치하여 선원-의사 간(해양의료연구센터) 화상으로 원격 의료 실시

- 원양선박의 승선원은 운항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해도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없고, 특히 고혈압,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.
- “해양원격의료 서비스” 대상 선박을 확대하여 원양선박 승선원에 대한 체계적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선원의 삶의 질 향상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더불어, 원양선박에 최적화된 원격의료 모델 및 장비개발을 통해 세계 의료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

해양원격의료 서비스

- 서비스 개념 ①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, ②화상원격의료상담 및 응급 처치 지도
- 서비스 구성 ①위성통신망을 이용한 해양원격의료시스템, ②의료장비 선내 탑재, ③개인건강기록 통합 조회·공유시스템

